

No. 2013-23

일본 경제 동향

(Japan Weekly Economic Digest)

2013. 06. 03

- ① 일본경제지표
- ② 주간경제이슈
: 아베노믹스의 함정
- ③ 경제정책동향
- ④ 일본기업동향
- ⑤ 한국관련워치

① 일본경제지표

□ 주간 시황지표

- 엔화환율 : 주가 조정애 따라 안전자산인 엔화에 대한 매입수요 증가로 지난주보다 엔저
- 장기금리 :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및 장기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때 0.965%까지 상승

구 분	5.27(월)	5.28(화)	5.29(수)	5.30(목)	5.31(금)
엔화의 대미달러화 환율(달러당)	101.02	101.63	102.30	101.20	101.03
엔화의 대원화 환율(100엔당)	1,113.63	1,112.53	1,100.14	1,118.42	1,116.58
닛케이평균주가(종가)	14,373.82	13,943.62	14,492.55	13,589.03	13,774.54
장기금리(10년물 국채금리, 연리%)	0.830	0.905	0.935	0.890	0.860

□ 주요 거시경제지표

- 4월중, 수입은 엔저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, 수출은 감소함에 따라, 무역수지 적자도 전월보다 확대
 - * 對한국무역은 수출, 수입 모두 감소
- 4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이어 계속 상승

구분	2011	2012	2013			
			1월	2월	3월	4월
실질GDP증가율(연율,%)	0.3	1.2(2.0)	3.5			-
수 출(천억엔)	653	639(637)	48	53	63	58
수 입(천억엔)	697	721(707)	64	61	66	67
對한국 수출	52.1	49.7(49.1)	4.01	4.25	5.21	5.07
對한국 수입	32.9	32.8(32.4)	3.12	2.92	2.81	2.58
직접투자(억달러)	(1,157)	(1,223)	226			-
對한국 투자	(24)	(40)	7.5			-
소비자물가(%)	0.0	▲0.2(0.0)	▲0.3	0.1	0.3	0.3
실업율(%)	4.5	(4.4)	4.2	4.3	4.1	-
경상수지(천억엔)	76.2	42.9(47)	▲3.6	6.4	12.5	-
엔화 對미달러	79.1	82.9(80.1)	89.2	93.2	94.8	97.7
환율 對원화(100엔)	(1,391)	(1,413)	1,197	1,166	1,161	1,148
외환준비고(기말 천억달러)	12.9	12.5(12.7)	12.7	12.6	12.5	12.6
국채금리(10년, 연리%)	0.985	0.560	0.740	0.665	0.560	0.600

주1) ()는 역년(1~12월)기준

2) 소비자물가, 실업률, 환율은 기간평균, 자료: 닛케이신문, 재무성, 한국은행

□ 주요 보고서 워칭 사이트(report watching site)

- 『일본기업의 입지대상지역으로서 동아시아, 연구보고서 : 일본기업의 입지대상지역으로서 동아시아의 매력과 리스크(2012년도)』, 아시아태평양연구소, 5월29일
 - *출처:<http://www.apir.or.jp/ja/research/files/2013/05/【13-08】鈴木先生.pdf>
- 『신흥국시장 개척 관련 조사·분석보고서 : 2012년도 내외일체 경제성장 구축 관련 국제경제조사』 경제산업성, 5월30일
 - *출처: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2013fy/E002732.pdf

② 주간경제이슈 :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과 영향

-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, 재정적자, 무역적자라는 트릴레마(trilemma)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를 통한 금리인하 유도정책이 장기금리 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남
- 지난 4월 일본은행이 국채 금리인 장기금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채권시장을 통하여 신규발행 국채의 70%상당을 매입함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가 과거 최저수준인 0.315%까지 하락
- 5월 15일 약 1년 2개월 만에 장기금리가 0.92%로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, 23일 한 때 1%대까지 치솟다가 반락한 후, 29일에는 0.935%로 다시 최고치를 갱신

□ 장기금리 상승의 요인

- 최근 일본 장기금리 상승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원인을 단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
- 일본 금융기관의 채권 투매설
 - 장기국채 금리상승은 일본 금융기관들이 장기국채를 매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, 다만 매도 이유는 잔존기간이 긴 국채를 팔고, 단기 국채를 매입하여 평균잔존기간을 단기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
 - 평균잔존기간 단기화 움직임은 금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금리 상승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하기 때문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은 향후에도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실질금리 인하 한계설
 - 「명목금리(장기금리)= 실질금리+기대물가상승률」이기 때문에, 실질금리 저하 폭이 기대물가상승률 상승 폭보다 크면 명목금리는 저하
 - 그러나 시장에서는 실질금리 저하 폭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임
 - 결국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장기국채매입으로 장기금리를 인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, 엔저·재정확대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
- 일본재정 불안설
 -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도 중앙은행이 장기금리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“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다” 라고 언급하며 일본 재정 건전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장기금리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

□ 일본의 대응과 전망

- 일본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0%에 달해 국채금리 상승은 재정 악화로 직결
- 더욱이 IMF는 일본에 대해 장래 출구전략으로 국채가격하락(장기금리 상승)에 따른 일본은행의 손실이 최고 GDP의 7.5%규모에 달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완화책 해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
- 다만, 최근 일본증시 폭락과 국채금리 급등은 아베노믹스의 예정된 조정 국면에 불과할 수도 있음
 - 양적완화 정책의 특성상 성패가 단기간에 뚜렷하게 판가름 나지는 않음
 - 또 국채금리 상승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도 인플레이션 유발에 따른 당연한 귀결인 만큼 정책의 부작용으로서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부분임
 -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장기금리 상승추세와 관련하여,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금리상승 등 충격에 대한 내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주장
- 그러면서도, 일본은행은 장기금리상승 억제책의 일환으로 국채매입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
 - 매월 8회 실시하고 있는 국채 매입을 6월 이후는 10회 이상으로 확대
 - 국채 매입 회수를 늘리면 금리가 급등해도 일본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
- 일본정부도 양적완화, 재정지출,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에 이어 4번째의 화살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임
- 일본이 인플레 정책을 고수하는 한, 이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은 남아있음
 - 물가목표 2% 달성이라는 인플레이션 유도정책으로 향후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, 시장관계자들은 금년 내에 약 1.4%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
 - 미국의 장기금리 2%에 비하면 현재 일본의 금리 0.8~0.9%포인트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1%까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

□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

- 부정적 영향
 - 일본경제가 장기금리상승으로 다시 장기침체에 빠지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, 이는 한국의 대 일본 수출기업에도 좋지 않음

- 또 일본의 국채가격 폭락으로 일본 은행권의 손실이 커진다면 자금난을 겪을 수도 있어, 이 경우 신용경색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내부의 자금을 빼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
○ 긍정적 영향

- 그러나 일본 채권시장의 난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, 완만한 금리상승과 함께 경기회복세가 수반된다면 국내 증시 부담으로 여겨졌던 엔저현상도 완화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임

○ 중립적 영향

-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아베노믹스 우려로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완화 정책이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며, 이 영향으로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제한될 것이라는 점에서, 그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
- 그러나 한편으로,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엔저를 강화시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우려도 있음
- 일본 실물경제의 회복 없이 인플레이션만 유발하고, 여기에 재정예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국채가격 폭락까지 이어지는 경우, 엔화의 추가적인 가치하락으로 직결되기 때문임

○ 종합 및 대응

- 이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님
- 다만,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체질개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재정수지 악화만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일본의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비한 외화 유동성 확보 등 대책 마련도 필요

3 경제정책동향

□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관·민 공동 대응

- 일본정부가 관·민 공동으로 기술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30여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포럼을 7월까지 발족할 예정
 - 퇴직자 등이 기술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기업과 엄격한 비밀보장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 예정
 - 일본정부는 6월초 각의에서 결정하게 될 지적재산정책 비전에 포럼 신설을 명기
- 신설되는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은 미국의 해외안전조언협의회(OSAC)를 참고한 것인데, OSAC는 기술유출 방지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동시에, 여타 국가들의 대처상황을 조사하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참가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
- 일본판 OSAC는 먼저 퇴직자와의 비밀보장계약을 참가기업들이 공유한 후 새로운 지침을 만들게 되는데, 정년이나 중도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사원이 전직 후 신흥국 기업 등에 유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
 - 경제산업성 조사에 의하면, 퇴직 후 비밀보장계약을 의무화하는 기업은 약 50%, 대기업에서도 60%에 불과
- 엄격하고 철저한 기술정보관리로 사외유출을 금지할 방침
 - 최근 전자화에 따라 반드시 기술전문가 아니라도 전자데이터의 기술정보를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할 수 있게 됨
 - 이에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구분, 관리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원을 한정하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방침
- 현재도 경제산업성의 기업정보관리지침 등이 있기는 하나, 변리사 등 전문가 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, 기업들로부터는 사용하기 어려워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
-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, 일본 기술자들이 신흥국기업에 재취직자리를 모색하는 상황에서, 기술정보의 유출방지와 전문 인력의 유동화를 여하히 양립시킬 것인가가 과제

□ 일본정부, 성장전략 초안 확정

- 일본정부의 성장전략 초안이 확정, 산업경쟁력회의를 거쳐 6월 중순 최종 발표될 예정
 - 성장전략은 기업의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국제화전략, 일본 국내에서 기업을 재생시키기 위한 산업부흥전략, 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시장창조전략 등 3가지가 근간을 이룸
 - 산업부흥전략에서는 올 가을까지 일본정부가 과당경쟁산업·기업의 재편을 촉진하겠다는 지침을 제시, 액정패널 등 사업통합회사와의 손익통산 적용제도를 검토
 - 또한, 공적자금이 안이하게 기업구제에 사용되지 않도록, 정부출자펀드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할 방침
 - 개별적인 투자결정은 민간이 주체가 되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한다고 명기하는 한편,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 3의 기관이 판단하는 방식을 도입
 - 국제화전략에서는 무역에서 점하는 FTA체결국과의 비율을 현재 19%에서 2018년에 70%로 확대하여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계획
- 이번 초안에서는 단기적인 경기회복 관련 정책은 대충 구색이 맞추어졌으나 중장기적인 경제구조변화를 위한 근본책은 논의가 되지 않고, 특히 법인세, 고용 등 최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는 평가
 - 대표적인 예로서, 고수준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증세가 끝나는 2015년 이후에나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강함

4 일본기업동향

□ 일본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 노력

- 엔저로 인한 원재료비용 상승으로 일본 중소기업들이 경비절감을 위한 경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
 -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유나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수지나 금속재료 등을 가공하여 일본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례가 많음
 - 이에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않고, 생산 공정이나 자재조달방법 등 자구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
- 경제산업성 추계에 의하면, 일본 중소제조업 중 엔저 메리트가 나타나기 쉬운 제품수출에 종사하는 기업은 3%에 불과함
 - 대다수 기업들에게는 석유계통 수지나 금속제품 등의 조달비용 상승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가 초미의 과제

<#사례 1> 반도체보호재료나 위생검사기자재를 생산하는 아텍트(주)는 엔저 영향으로 작년 10월에 비하여 원재료비가 약 30% 상승

- 원재료의 조달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, 외주에 의존했던 일부 공정을 내제화하여 원재료 사용량이나 제품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낭비 제거
- 금년 가을까지 생산라인에 대한 성력화(省力化 : 노동력 등의 절감)도, 연간 1억 엔의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목표

<#사례 2> 도금업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표면처리용 금속의 비용 상승까지 가세

- 자동차부품을 도금하는 (주)타이쿄제작소(大協製作所)는 고객들의 주문대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사용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절전 및 절수로 경비를 줄이는 노력을 경주
- 비용 절감 아이디어는 전기도금설비인 치공구의 개량을 통해 1회당 도금처리 가능량을 배증시키면 설비의 가동시간이 줄어, 전기나 물의 사용량, 폐수처리비용 등을 절감

<#사례 3> 목조주택을 제조하는 (주)카토공무점(加藤工務店)은 10%나 상승한 캐나다산 수입목재 대신에, 니가타산 삼나무를 사용, 자재조달비용을 절감

- 지방의 건자재를 활용한 지역형주택의 브랜드화를 지원해 주는 정부 보조금을 활용
- 외국산 목재는 지역의 23개 회사가 연대하여 공동 조달할 계획인데, 조달규모를 늘려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비용의 상승분을 흡수